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시각



허윤정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현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세우고 건강보장, 소득보장, 돌봄보장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장 영역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 발표 이후 진료비 부담이 높던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하고, 입원진료비와 고가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의료비로 인한 빈곤 등 건강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러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건강보장이 단순히 의료의 문제가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장애인·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보장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상호 연계로 달성 가능한 영역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 호(제13권 3호)에서는 사회보장체계 연계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추진전략을 고찰한 바 있다.

이번 제13권 5호에서는 포용적 복지의 관점으로 한발 더 나아가 ‘건강보장의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의료와 다른 사회보장 영역을 연계하는 새로운 시도들을 탐색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신기철 교수는 보장성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질병으로 인한 상실 소득을 법정유급병가나 사회보험의 상병수당 형태로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 규범 서울재활병원 부원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18.5.) 등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과제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소예경 부장은 보건·의료·복지의 세 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301네트워크사업’을 소개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통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다 폭넓은 정책방향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